

‘전남광주특별시’ 명칭·청사 난제 ‘통합’ 큰 뜻으로 풀었다

“통합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지역 생존 위해 전략적 결단
주소재지 등기 등 숙제 여전… 선거 과정서 논란 재점화 우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암초로 꼽혔던 명칭과 청사 문제가 27일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돼 ‘통합 특별시’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통합명칭이 매듭지어진 것은 지역 생존이라는 대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차acet 통합 추진 초기에 지역간 갈등이 표면화함으로써 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지게 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명칭·청사, 실리보다 ‘상생’ 택했다=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7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에서 통합 자체의 공식 명칭은 시도민의 수용성과 양 지역의 역사·대표성을 담아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했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남악)청사, 광주시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사용하기로 합의됐다.

이제부터 통합자체 명칭과 청사 주소재지 문제는 통합 추진의 ‘판도라의 상자’로 불렸다.

대구·경북 등 타 시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주도권 다툼으로 번질 경우 통합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커 때문이다.

이에 시·도는 ‘전남’의 역사적 상징성을 앞세운 명칭인 ‘전남광주특별시’를 택하되, 인지도가 높은 ‘광주’를 약칭으로 사용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청사 문제 또한 특정 지역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동부·무안·광주의 3개 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으로 지역 내 소외감을 차단했다.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과 시·도민의 정서적 결합을 우선시한 포석이다.

◇주소재지 법적 등록, 피할 수 없는 ‘숙제’= 다만 이번 합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과 민법에 따르면 지자체 역시 법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주된 영업소나 사무소를 관보에 게재하고 등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소재지 명시’는 법적 실무상 피해야 하는 숙제로 남기 때문이다.

현재는 3개 청사의 균형 운영이라는 원칙으로 갈등의 불씨를 잡아왔으나, 실제 법인 등기 시 어느 지역을 주소지로 등록할 것인지는 향후 행정적 절차에서 재론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합의가 모든 논란을 종식한 마침표라 기보다는, 잠시 덮어둔 ‘뜨거운 감자’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특별법 밤의를 위해 3개 청사 균형 운영이라는 원칙을 세웠으나, 향후 법안 심사 과정이나 통합 시정 출범 이후 구체적인 행정구역 상의 주소지를 어디로 둘 것인지를 두고 다시 논의가 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는 6월로 예정된 통합 특별시장 선거에서 이슈로 부각되는 등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가 행정 효율성 제고나 지역 공약의 하나로 특정 청사의 주소재지화를 주장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하거나 기능 재배치를 제안할 경우, 어렵게 봉합된 논란은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다.

통합자치단체장이 주로 근무할 주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꺼지지 않은 불씨다.

◇미봉책 넘어서 통합의 대의 강조돼야=결국 이번 결정은 법적·실무적 완결성을 갖춘 최종 답안이

라기보다,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유보’이자 ‘미봉적 합의’의 성격이 짙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명칭과 청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기정 시장이 “명칭에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김영록 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청사 분산 운영에 합의한 것은 자치분권의 권한과 재정을 정부로부터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실용적 판단이 깔려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광주 특별법 ‘운명의 한 달’…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속도전’

오늘 발의…행안위·법사위 거쳐

내달 말 최종 의결 목표

지방선거 전 통합 법적 토대 마련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8일 국회 발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입법 궤도에 오른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말까지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별법은 28일 광주·전남 18명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된다.

발의 직후 법안은 국회의장의 보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다.

통상적인 법안 처리에는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 특별법은 행정 통합이라는 시급성이 고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해 특별법안을 신속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협의경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이 요구한 300여 건의 핵심 특례 사항인 재정 지원 의무화, 애너지 및 AI·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법사위는 법안의 법률적 정합성을 따지는 최종 판문으로, 이곳에서 승인된 법안만이 본회의 상정 자격을 얻는다.

시와 도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월 중순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2월 말 예정된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이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기반이 완성된다.

양 시도가 2월 말 통과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선거 일정 때문이다.

통합 자치체장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2월을 넘길 경우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통합 시장·지사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행정 통합 일정 전체가 치질을 빚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주청사 없이 3곳 분산 미봉책 합의…지역 민심 ‘싸늘’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청사 소재지 문제는 ‘주청사 없는 3청사(동부·무안·광주) 체제’로 가닥이 잡혔다.

지역 정치권이 특정 지역에 본부를 두지 않고 기능을 분산해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지역민들은 “행정 효율을 무시한 정치적 나눠 먹기”라며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7일 광주시장과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4차 간담회를 갖고 통합 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방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의 골자는 ‘주청사’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대신 전남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 청사 등 3곳에 균형 있게 기능을 배분해 공동 청사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도 ‘광주·전남 대통합 사·도민 소통 운영 플랫폼’에는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 시민들은 ‘주청사 폐지’가 사실상 ‘밀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한 시민은 플랫폼 게시글을 통해 “주청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뜻 아니냐”며 “나주 혁신도시와 군공항 문제에서도 양보만 거듭

해 온 광주가 이번에는 실체도 불분명한 3청사 조기로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기능을 3곳으로 나누면 행정 비효율은 누가 감당하느냐”며 “광주의 중심성을 훼손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비단의 화살은 이번 합의를 주도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백년대계보다는 당장의 여론 무마와 자신의 정치적 안위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하고 있다.

특히 3·4·자 간담회 당시 일부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뜯고 사설도 드러내며 올랐다.

시민 김모(48·서구)씨는 “광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회의의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지역 대표로서 할 태도냐”며 “지역민의 절박함은 외면한 채 중앙당 눈치만 보며 공천권에만 목매는 ‘무자격 의원’들을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광주 의원들의 존재감이 전남의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광주문화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